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의 닳을 올리다

-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 6개 시·도에 약 33.8조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6월 8개 시·도(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기회발전특구*를 최초 지정한 이후,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도 11.6일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로써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지방시대 新성장거점 토대가 마련되었다.

*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며,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

이번에 지정된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150여개의 기업이 약 16.4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7.4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33.8조원의 투자가 동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



이번에 지정된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의 상세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① (울산광역시) 전기차,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대규모 기업투자가 다수 유치된 남구·북구·울주군에 총 126.9만평 지정
- ② (세종특별자치시) ICT/SW, 로봇, 의약품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집현동·연서면·전동면에 총 56.3만평 지정
- ③ (광주광역시) 자동차부품, AI 데이터센터 등의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광산구·북구에 총 36.5만평 지정
- ④ (충청남도) 바이오의약품, 수소, 식품, 석유화학, 방산,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예산·보령·서산·논산·부여에 총 143.6만평 지정
- ⑤ (충청북도) 반도체·이차전지 소재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식품·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제천·보은·음성·진천에 총 109.6만평 지정
- ⑥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배터리모듈, 수소, 광물 등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홍천·원주·강릉·동해·삼척·영월에 총 43만평 지정

이차전지·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에너지, 광물,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이 유치되었으며, 기회발전특구의 여러 인센티브를 활용해 해외투자를 고려중인 기업을 국내투자자로 선회시키거나 수도권에 있는 본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유치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11.6(수)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지방시대엑스포”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은 6개 시·도와 각 시·도별 투자기업이 모여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기업이 약속한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협약에 참여한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의 주요 투자내용 >

- 【울산】 : SK가스(주)가 LNG저장탱크 및 수소생산시설을 건립하는데 1조 3,800억원을 투자
- 【세종】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이 항혈전치료제 등 의약품 생산공장을 건립하는데 638억원을 투자
- 【광주】 : (주)DH오토웨어가 미래차 부품 생산공장을 건립하는데 446억원을 투자
- 【충남】 : (주)셀트리온이 바이오의약품 및 관련 원부자재 생산공장을 건립하는데 3,000억원을 투자
- 【충북】 : 티이엠씨(주)가 반도체용 가스 제조공장을 건립하는데 700억원을 투자
- 【강원】 : 디엘(주)이 액화수소 저장·운반용 탱크 생산시설을 건립하는데 500억원을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엑스포 기념사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오늘 지정된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었고, 전체 지방투자 규모는 74.3조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들에 대해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은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9.2일)된 상태이며, 법안 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적용대상: (現)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 (改) 중소기업/전체 중견기업
공제한도: (現) 최대 600억원 → (改) 한도 없음

또한, △지방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특례, 특별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25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35억원, `25년 정부예산안).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성진 (044-203-4420)
		담당자	사무관	최선헌 (044-203-4405)
	지방시대위원회 과학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은구 (044-251-3126)
		담당자	사무관	김창연 (044-251-3139)



참고 1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6개 시·도)

지역(입지)		분야	면적(만평)	지정여부
울산	남구·북구(울산미포국가산단)	전기차 등	37	지정
	울주군(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이차전지	39.4	지정
	울주군(온산국가산단)	이차전지 소재, 석유화학	42.8	지정
	남구(울산북신항, 배후단지)	LNG 저장탱크 등	7.7	지정
세종	집현동(스마트 도시첨단산단)	ICT/SW, 로봇 등	24.9	지정
	연서면(스마트 국가산단)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27.2	지정
	전동면(전동 일반산단)	의약품 등	4.2	지정
광주	광산구(빛그린 국가산단)	자동차부품	20.7	지정
	북구(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I 데이터센터 등	15.8	지정
충남	예산(내포농생명그린바이오 일반산단)	바이오 의약품 등	40.5	지정
	보령			
	(고정국가산단)	수소	24.3	조건부 지정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낙찰)
	(냉열특화 일반산단)	식품	20	지정
	서산(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단)	석유화학 등	23.4	지정
	논산(국방국가산단)	방산	19.6	지정
	부여(부여 일반산단, 부여 은산2농공단지)	이차전지 관련	15.8	지정
충북	제천(제천 제2, 4일반산단)	식품·자동차부품	27.2	지정
	보은(보은 제3일반산단)	반도체 관련	25.7	지정
	음성(상우일반산단)	반도체	12.5	지정
	진천(진천 메가폴리스 일반산단)	이차전지 소재	44.2	지정
강원	홍천(홍천 도시첨단산단)	의약품 등	0.6	지정
	원주(원주 부론일반산단)	배터리 모듈 등	11.8	지정
	강릉(강릉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의약품 등	18.5	지정
	동해(동해 북평국가산단)	수소 등	4.5	지정
	삼척(삼척 수소특화 일반산단)	수소 등	2.9	지정
	영월(영월 녹전리 핵심소재산단)	광물	4.7	지정

참고 2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도 [6개 시·도]

세종특별자치시

- 연서면(의약품·자동차부품 등)
- 집현동(ICT/SW·로봇 등)
- 전동면(의약품 등)

충청남도

- 보령(수소·식품) *일부 조건부 지정
- 예산(바이오의약품 등)
- 서산(석유화학 등)
- 논산(방산)
- 부여(이차전지 관련)

광주광역시

- 광산구(자동차부품)
- 북구(AI데이터센터 등)

강원특별자치도

- 강릉(의약품 등)
- 원주(배터리모듈 등)
- 영월(광물)
- 동해(수소 등)
- 삼척(수소 등)
- 홍천(의약품 등)

충청북도

- 진천(이차전지소재)
- 제천(식품·자동차부품)
- 보은(반도체 관련)
- 음성(반도체)

울산광역시

- 울주군(이차전지(소재)·석유화학 등)
- 남구·북구(전기차 등)
- 남구(LNG저장탱크 등)

참고 3

14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도



1차 대전, 전북, 전남, 제주, 경북, 대구, 부산, 경남

2차 세종, 충남, 광주, 강원, 충북, 울산

참고 4

기회발전특구 개요

- (개념)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 (대상지역)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 (입지) 지방정부가 투자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 선정

*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既 조성된 계획입지, 개별입지 등 모두 가능

- (면적)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4.95km²(150만평), 도: 6.6km²(200만평)) 내에서 복수의 특구 신청 가능

- (지정절차) 지방정부(시·도지사)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산업부장관이 지정

- (지정요건) 기업의 입주수요,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

- (지원내용) 세제·재정,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

- ①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② 특구 내 가업상속시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등 사후관리요건 완화
- ③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 및 특구 내 창업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 매입시,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 ④ 특구 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
- ⑤ 특구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

참고 5

기회발전특구 주요 인센티브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소득·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내 취득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5년 100% + 2년 50% 감면)
② 취득·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에서 특구(비수도권)로 기업 이전 시 *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감면,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감면 • 특구 내 창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재산세 5년 100%+5년 50%(조례)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3년 100%+2년 50% 감면 • 공장 신·증설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
③ 상속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 특구 창업·이전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24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 - (한도) 최대 600억원 → 한도 없음
④ 이자·배당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일정 기간(10년) 이상 투자 시 9% 분리과세
⑤ 양도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내 주택 취득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⑥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5%p) 가산
⑦ 개발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부담금 100% 면제
⑧ 규제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가 규제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
⑨ 주택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⑩ 공동 직장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 ⑦개발부담금 감면, ⑧규제특례, ⑨주택 특별공급 등의 경우,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국회 통과시 적용